

장애와 차별(인권)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주요 학습문제

- 차별은 무엇인가?
- 장애와 차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차별은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차별의 요인은 개인에게 있는가? 사회에서 오는가?
- 장애인 차별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차별의 의미

-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
- 개인과 집단들간의 차이 가운데 특정한 차이들이 차별로 전환되는 것은 그 차이가 **권력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어 서열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 열등한 존재로, 또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임.
-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서열화의 판단기준으로서 '능력'은 **지배집단의 속성을 띤 요소들로 구성되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집단은 분리되고 배제되며 통제됨.
- 그러한 **통제 동기와 의도를 은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며, 지배집단은 이러한 편견을 통해 약자에게 열등감의 이미지를 주입하여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함
- 차별은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폭력 중 하나

차별의 유형

- 직접차별
 -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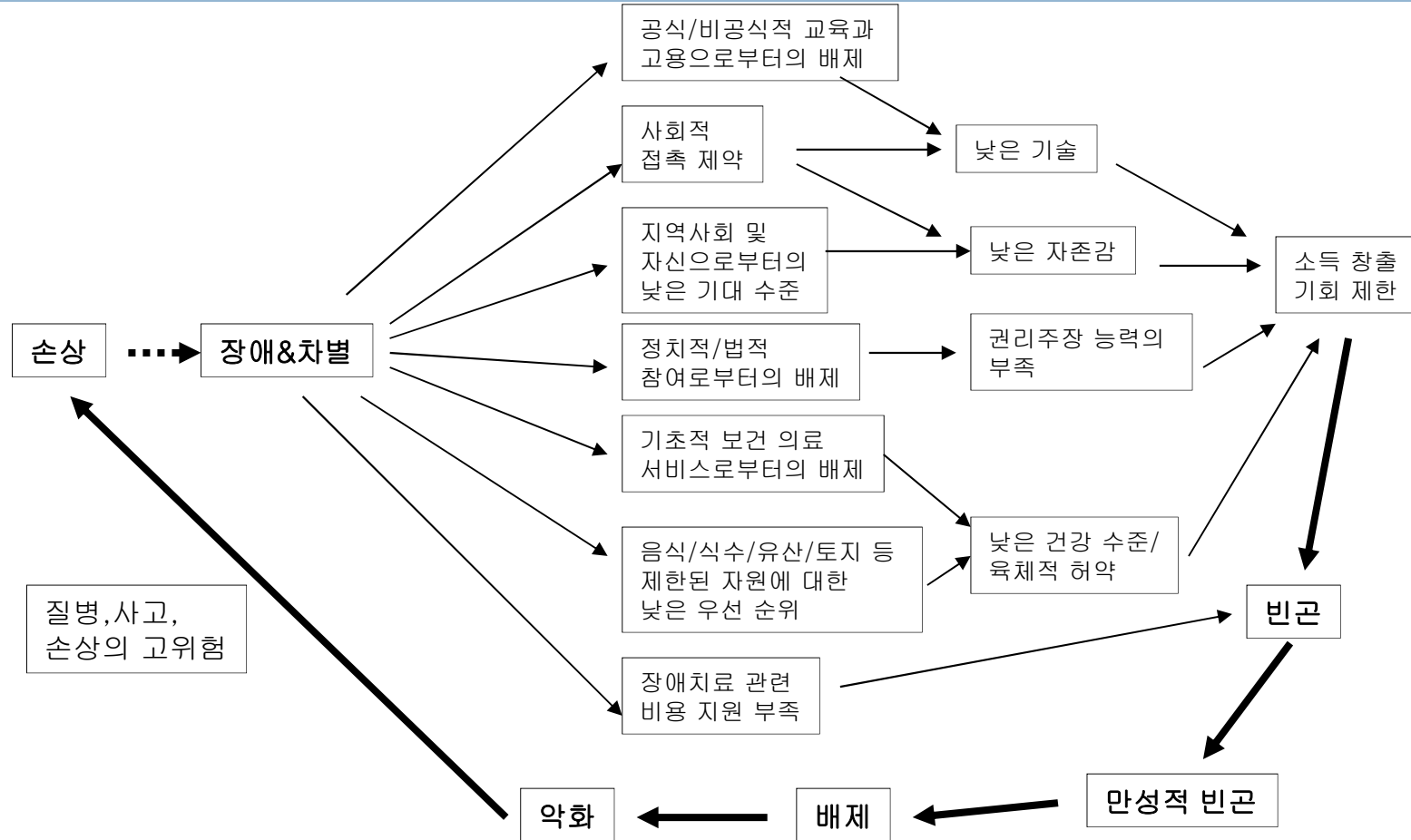
차별의 유형

-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또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차별이 아님**
 - ▣ 적극적 조치는 차별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차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취하는 한시적인 것
- **정당한 사유란?**
 -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상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과도한 부담: 정당한 편의제공 등으로 인한 경영이나 시설 유지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
 - 불가피한 경우: 직업이나 사업의 성격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업이나 사업의 경우

차별의 실태 및 영향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전체 장애인의 39.9%가 항상 내지 가끔 차별경험
 - 자폐성, 언어, 안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 장애인의 80.7%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인식
 - 교육, 고용, 여가활동, 재화와 용역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 경험
 - 학교생활에서 차별가해자: 학생>교사>학부모
 - 취업에서의 차별경험 34.0%
 - 결혼에서의 차별경험 26.5%
 - 보험계약시 차별경험 53.7%
 - 지역사회 공중이용시설에서 차별경험 7.8%
- 이러한 차별경험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삶의 질 수준에 못 미치는 차별적 삶을 살게 하는 요인
 - 중졸이하 63.0%, 고용율 35.5%, 여가활동만족도 39.5%

장애와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차별의 원인

- **개인 혹은 내부에 있다!**
 - ▣ 차별의 원인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 ▣ 차별의 책임이 장애인에게 있기에 차별의 제거 역시 장애인 개인의 몫
 - ▣ 장애극복신화, 인간승리신화
- **사회의 제도와 사회의 인식에 있다!**
 - ▣ 장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이 아니라 사회의 차별과 억압 자체
 - ▣ 장애인을 주류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사회의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와 책임
 - ▣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사회적 억압

차별의 특성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난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중복적으로 나타난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분리와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의해 일어난다

관련 법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 ▣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
 - ▣ 2006년 UN총회에서 채택, 2009년에 한국 비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들의 차별금지조항 실효성 미비
-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 ▣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스웨덴(1999), 독일(2002), 홍콩(1995)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결성 후 법제화 노력
-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차별금지영역 : (1) 고용

- 근로관계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시설의 편의제공은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3) 차별금지영역 : (2) 교육

- 입학 및 전학의 강요/거부 금지
- 통학 및 이동 시 편의시설을 제공
-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 수업 시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
- 인력 배치에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차별금지영역 :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의 이용을 보장
- 시설물 이용 시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을 제공

3) 차별금지영역 : (4) 문화/예술/체육활동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차별금지영역 : (5)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행정서비스 이용 시 점자자료, 인쇄물음석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3) 차별금지영역 : (6) 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29조에 따르면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입양 등에서 모/부성권 보호 위해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 금지
 - 교육책임자 부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차별금지영역 : (7)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위해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3) 차별금지영역 : (8)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등을 포함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권리구제

-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 없이 1331
- 과태료 및 벌금 등
 -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이란?

-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확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배경

-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억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 의학발전, 전쟁 그리고 노령화,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 집단이므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모든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협약이 제정되었다.

□ 구성과 주요내용

- 협약은 전문과 50개 조항 및 18개조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 전문은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되었으며,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 주요 구성 부분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본문은 총 50개 조항으로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의의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과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침해 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영역들을 확인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합당한 실행 구조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할 보편적인 최저 기준을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제정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2009년 뒤늦게 비준
- 국내법과의 조화를 명분으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 유보와 선택의정서 미가입**
 - ▣ 상법 제732조(생명보험 조항)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는 동법 개정 시 유보 철회 검토
 - ▣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가 국내 구제절차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허용**되며,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접조사권을 인정하므로 **당사국의 재판권 및 주권과 충돌할 소지**

향후 과제

-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및 철폐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예방 교육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관련법령 정비